

輸入自由化의 方向과 限界

林 鍾 哲
(서울大 社會大 教授)

輸入自由化에 대한 論議는 財貨 및 用役의 同時的 供給을 수반하지 않는 購買力의 과다한 증대 특히 海外建設用役弗의 流入으로 인하여 國內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가장 신속하면서도 손쉬운 對應策으로서 일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輸入自由化, 한 걸음 더 나아가 國際經濟關係의 自由化는 그러한 近視眼의 利害關係에서 論及되어서는 안될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自由化문제를 좀더 근본적이며 長期的인 次元에서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1. 互惠의 大原則

인간사회에서 생기는 모든 現象은 모든 行爲의 主體인 人間의 態度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人間의 태도는 事物에 대한 人間의 認識이 어떠한 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輸入뿐 아니라 輸出, 資本導入 또는 對外投資등 온갖 國際經濟現象에 대한 우리의 態度는 國際經濟關係란 國際政治關係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互惠(reciprocity)란 大原則위에서만 永續적으로 調和로운 關係를 가질 수 있다는데 대한 투철한 인식을 토대로 세워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國際關係를 결정짓는 要因 역시 互惠임을 우리는 동시에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B라는 利益을 他國에 주지 않는 한 A라는 利益을 他國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얻을 수는 없고 C라는 不利益을 타국에 持續적으로 주고 있는 한 언젠가는 D라는 不利益을 되돌려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 C란 不利益을 계속 他國에 주면서 언제나 A란 이익을 얻

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國際經濟社會에는 國際政治社會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힘의 論理가 作用하고 있어 實質的인 不平等機構가 機能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오랜 歷史의 눈으로 본다면 GATT 支配는 19세기적인 帝國主義 國際經濟支配보다 개선되었고 그 GATT 支配도 UNCTAD 結成이후는 그 이전보다는 改善을 志向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一國의 經濟政策이란 人類史의 먼 將來까지 展望하면서 地球號 宇宙船속에서의 調和로운 國際經濟關係定立을 통한 國民·國家의 繁榮을 구상해야 하는 것이므로 互惠의 大道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강한 偏倚를 보여서는 안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격심한 外換危機와 經濟的 低開發의 수렁속에 있었으므로 近隣窮乏化的 差別政策을 써왔고 그 不得已함이 國際社會에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IMF 14條規程등에 의해 差別主義가 용납된 것이나 이제 貿易規模 2백억달러를 넘어 세계17位의 무역大國으로 발돋움한 다음부터는 우리에게도 Nobless Oblige가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 이점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1962년이후 輸出을 통한 經濟發展이란 戰略을 취해온 우리나라는 1962~77년간에 연평균 42.1%란 높은 輸出增加率을 制限貿易이란 便法을 바탕으로 이룩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75년까지 만 하더라도 赤字를 면하지 못하던 一般貿易을 1976년에는 총수출 7715.1백만달러에 대하여 一般輸入(총수입에서 청구권자금, 공공원조 차관 및 구호기타에 의한 수입을 뺀 것)이 6971.3백만달러로 743.8백만달러란 赤字를 실현하였고

1977년에는 그 크기를 1,006.4백만달러로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수출규모로 보아 세계 17위이고 무역규모 20,857.0백만달러, 輸出入比率이 92.9%, 一般貿易黑字 1,006.4백만달러, 經常去來黑字 2071.9백만달러 (經常收入 13,217.2백만달러에 대한 經常支給 11,145.3백만달러, 外換保有額 4,306.4백만달러, 세계 총 外換保有의 1.4%의 貿易大國이 앞으로도 계속 輸入을 엄격히 규제하여 外國에 대한 門戶를 閉鎖하고 輸出에 대하여서는 갖가지 支援을 주어 外國市場門戶를 억지로 開放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互惠의 大原則에 어긋나며 더이상 通用될 수도 없게 될을 명심해야 한다.

2. 自由貿易의 大道

일반적으로 國土가 廣大한 나라는 낮은 平均輸入性向을 갖고 경제성장율이 낮은 나라는 낮은 限界輸入性向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資源의 고르지 못한 賦存 및 오랜 역사를 통하여 특수하게 형태지워진 生産構造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나라이든간에 1백% 自給自足を 할 수는 없다. 것처럼 광활한 국토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美國조차도 自給自足率은 91.7%에 머무르고 있으며 미국 못지 않은 國土와 資源을 바탕으로 한 世代이상에 걸쳐 강력한 自給自足政策을 추구한 蘇聯도 1975년 현재 GNP의 9.2%에 해당하는 36,969백만달러를 輸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小國이므로 平均輸入性向이 높지 않을 수 없고 급속한 經濟發展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限界輸入性向 또한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1977년의 平均輸入性向은 42.9%에 달했고 限界輸入性向은 53.1%에 달하였다. 따라서 工業化를 위한 投入輸入이 대부분이 이같이 激增하는 輸入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연히 輸出에로 力點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때문에 한국경제는 輸出 및 輸入의 兩面에서 國際經濟社會와 全面的인 접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국제경제사회와의 접촉방식은 自由主義와 規制主義의 두가지가 있을 뿐이므로 우리는 이두가지 原則중 어느 것을 취할 것이냐 하

는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에 있어 最善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自由主義 貿易理論이다. 各産業은 그 고유한 屬性에 따라 相異한 生産性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歷史的, 社會的인 요인이 加味되어 현실적인 生産力의 順位가 결정된다. 예컨대 農業은 서비스業보다 技術進步에 伸縮的이므로 實物生産性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停滯되는 需要構造를 갖고 있어 高所得社會에서는 그 收入生産性이 낮아진다는 것이 곧 그것이다. 그런데 一國이 갖고 있는 土地, 資本, 勞動力 등 生産要素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生産性의 提高를 위해서는 收入生産性이 높은 産業에 生産要素를 집약시켜야 한다. 따라서 자연히 資源의 부족으로 손이 안돌아가는 산업도 있게 되고 他國보다 比較生産性이 낮아 競爭의 淘汰를 당하는 산업도 있게 된다. 이러한 산업의 生産物에 대한 수요는 輸入에 의해 충족시키고 이를 위해 필요한 代錢은 生産性이 높은 산업의 生産物을 수출하여 얻은 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더구나 이 경우 문제되는 生産性은 그 절대수준이 아니라 相對的인 관계가 중요성을 가지므로 절대적으로 生産력이 낮은 국가로 自由貿易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自由貿易論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이때 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自由貿易論이 말하듯 比較生産性이 높은 산업을 特化하여 그 剩餘를 수출하고 그 代錢으로 필요한 상품을 外國에서 수입하는 가운데 국민경제의 순환과 국민생활의 營爲,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경제의 성장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때에는 성장율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相對的인 크기와 관련해서 自由貿易이란 커다란 經濟政策原理의 合目的性이 문제된다. 즉 현대 國際經濟社會에서 가장 긴급한 經濟政策課題의 하나가 되어 있는 國民간의 所得 및 生活水準隔差가 자유무역에 의해 축소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확대되느냐 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담배生産을 特化한 나라와 自動車生産을 特化한 나라의 10년후의 經濟的地位는 同一한가, 따라서 현실적인 政策命題로 技術的 隘路가 없을 경우 우리가 담배를 생산하는 농업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또는 자동차만 生産

하는 工業國家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直面케 된다. 이러한 문제를 經濟理論은 한 產業에서의 所得—單位增加가 국민경제 전체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소득증대를 가져오는가 하는 量的 關係를 밝혀주는 소위 成長의 強力性係數란 개념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 체너리(H. Chenery)의 計測에 의할 때 成長의 強力性係數는 投資財產業은 평균 2.16이고 中間財產業은 1.50이며 消費財產業은 1.31로 가장 낮으며 機械工業은 2.80으로 가장 높고 輸送用機器工業은 2.33인데 식료품工業은 1.13이고 담배產業은 0.9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동일한 1천달러 소득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機械工業立國을 한나라는 3,800달러의 소득을 누릴 때 담배生産國家는 1,930달러의 소득밖에 못누리는 결과가 나온다.

制限主義의 타당성은 國際分業에 대한 이같은 動態的 考察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산업을 장래의 發展을 위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결론은 결코 導出되지 않는다. 保護主義에는 費用·效果分析이 따르는 것이니 合理的인 기간동안 보호됨으로써 國際競爭力을 갖춘 產業으로 성숙할 수 있는가 실혹 성공적으로 보호, 육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產業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육성을 위해 投入되었던 費用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밝혀야 한다. 적어도 이두가지 要件을 갖춘 產業만이 보호육성의 대상이 되는 幼稚產業 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못하다. 經濟的 資源의 有限性은 一國으로 하여금 모든 產業을 갖게 하지 않으므로 幼稚產業 중 어떤 것을 육성할 것인가를 현명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한 經濟政策研究의 오메가는 결코 아니다. 保護對象產業이 선정되면 그 成熟에 필요한 合理的 保護手段을 선정하고 그 手段의 效率의 援用을 통하여 최단시일 안에 自立을 시키고 나서는 自由貿易의 大道에 나설 姿勢를 강화해야 한다.

3. 經濟立國의 기본 테두리

貿易自由化는 이상의 原則論에 비추어 한나라가 國際經濟社會의 존경받는 멤버가 되기 위한

必須條件이며 또한 調和로운 國際經濟關係 창조의 礎石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貿易自由化는 하느냐 않느냐의 선택이 결코 될 수 없다. 다만 한나라가 갖는 經濟立國의 基本構想에 어떻게 有助하게끔 추진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될 뿐이다. 한나라의 經濟活動의 크기와 내용은 資本, 自然, 人口=勞動力등 計量可能한 要因과 技術, 組織 및 制度, 態度등 計量不可能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나라가 다른 工業先進國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풍부한 資原이란 利點을 못갖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資本이 우리에게 比較優位를 주기는 어렵다. 自然 또한 마찬가지이다. 土地/人口比는 세계에서는 가장 작은 國家이고 地下資源의 寶庫라는 말을 더러 듣지만 工業化를 위하여 불가결한 資源인 鐵鑛石 및 石油, 石炭등은 資源없는 나라들중에서도 가장 貧弱한 그룹에 속한다. 끝으로 勞動力은 1960年代까지는 그럭저럭 彈力的인 공급이 가능했지만 1970년대에 들어 오면서부터는 점점 非彈力的이 되어가고 職種, 職能別로는 격심한 供給隘路, 거의 完全非彈力的인 供給事情을 露呈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計量可能한 생산요소, 소위 成長의 外的 要因면에서는 比較優位가 없지만 이들 次要因에서 事情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土地 및 資源은 그 크기가 固定되었거나 흔히 枯渴性을 갖는 것이므로 利點이 줄면 줄었지 커지지는 않는다. 물론 기술진보가 資源을 절약하고 代用資源을 새로 만들어주고 하기는 하지만 自然/人口의 벨러스가 이 때문에 一舉에 好轉될 수는 없다. 한편 人口는 所得增大에 비례하여 그 增加率이 進減함을 볼 수 있지만 人的 資本에 대한 集中投資는 1人當 勞動生産性을 높임으로써 量的 劣勢를 質的 改善으로 카바할 수 있다. 끝으로 資本은 所得이 커짐에 따라 限界貯蓄性向이 높아지므로 그 공급은 점점 더 彈力的이 되어갈 것이며 이것은 資本裝備率이 장래는 加速度的으로 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所興의 技術下에서는 資本裝備率에는 한계가 있어 끝내는 規模의 不經濟를 가져오게 된다.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技術革新이란 成長의 內

的 要因의 變化이다. 즉 技術革新은 人的 資本 및 實物資本에 資本集約的인 變化를 일으킴으로써 그 生産性을 높여주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技術革新은 과거의 맨하탄計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研究開發費用(=R&D支出)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즉 그것은 최종적으로 기술을 開發하는 研究팀 또는 研究所에 대한 방대한 R&D支出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該當科學分野 또는 關聯産業分野에 대한 先行的인 基盤造成投資로 부수적으로 필요로 하며 또 一般的인 기초로서 一般教育에 대한 投資方出까지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技術의 獨自的 開發은 資本蓄積보다도 더 오랜 시간과 방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絶對額에 있어서나 경제 발전, 科學發達의 단계로 보나 先進國과는 단순한 所得의 隔差이상의 lag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技術이란 成長의 內的 要因면에서도 優位를 가질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悲觀的인 물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답은 결코 否定的인 것은 아니다. 물론 최근에는 技術이 단순한 機械設備란 Tangibles의 형태로가 아니라 技術情報 Know-How란 Intangible한 형태로 점차 이용가능하게 되어가므로 그 역시 弱少國을 위하여 불리한 作用을 해가고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범위의 技術갭 (technological gap)안에서는 特殊使用料 支拂을 통하여 비교적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일정한 범위의 기술갭이란 선진국의 尖端技術을 國內生産에 順應시킬 수 있는 技術消化能力의 存在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産業技術을 스스로 개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모자라지만 남이 開發한 기술을 우리 實情에 맞도록 수정하여 活用할 능력은 크므로 한국경제의 國際經濟的 利點은 技術을 매개로 하는 部門에서 찾아야 한다는 結論이 나온다. 이러한 觀點에서 구상된 長期經濟開發展望이 KDI에서 마련한 「長期經濟社會展望 1977~91년」이다. 여기서는 우리의 比較優位가 「電子, 機械등의 技術集約인 重化學工業製品」에 있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은 技術갭 및 資本不足이 制約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重化學工業中心으로 産業을 개편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科學技術의 振興과 技術開發에 最

大의 力點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自動車, 電子, 造船, 機械등을 重點育成하되 技能集約的인 것으로부터 技術集約的인 것으로 移行하는 戰略을 취하겠다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그 基礎産業으로서 鐵鋼, 非鐵金屬, 化學工業등 素材工業을 마련한다는 政策態度를 밝히고 있다. 그결과 1975년에 54.6%이던 輕工業의 비중이 1991년에는 34.9%로 크게 줄고 第1次金屬工業은 7.7%에서 11.3%로, 기계공업은 10.0%에서 20.2%로, 電子工業은 4.5%에서 13.2%로 커질 것을 展望하고 있다. 重化學工業의 비중이 45.4%에서 65.1%로 19.7%포인트 커지는데 第1次金屬工業이 그 18.3%인 3.6%포인트, 기계공업이 그 51.8%인 10.2%포인트, 電子工業이 그 44.2%인 8.7%포인트 커지도록 되어있으므로 앞으로 15년간의 工業發展은 이들 製造業을 主軸으로 실현시키겠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확고한 방침이며 이러한 決定은 한국경제의 현재의 諸與件에 비추어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輸入自由化의 方向과 限界

스탠포드研究所가 조사한 「경제성장단계에 대응하는 各産業의 消長」에 의하면 농업, 채굴업, 원료가공업, 비내구소비재산업, 운수업, 전력·가스業은 傳統的 단계를 넘어 과도적 단계에서는 急成長하나 離陸과 技術的 成熟단계에서는 中位의 成長率을 보이다가 工業展開完了시에는 완만한 성장을 보임에 반하여 무역, 금융, 組立, 半製品製造業은 離陸단계이후 급성장을 보이기 시작 道立, 半製品제조업을 제외하고서는 工業의 展開完了 단계까지 그 템포를 지속하며 끝으로 耐久소비재, 生産者財, 化學, 電子工業등은 技術的 成熟과 工業化展開完了단계에 가서 처음으로 급성장을 한다는 共通되는 經驗을 밝혀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離陸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技術的 成熟의 단계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組立, 半製品제조업에서 耐久소비재 生産者財, 化學電子工業등으로 主力産業의 비중이 넘어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要素集約度를 기준삼아 분류한

다면 우리는 현재 勞動集約的 輕工業을 하루속히 다른 발전도상국에게 移讓하고 勞動集約的 輕機械類생산의 단계도 가급적 단시일안에 완료한 다음 勞動集約的 重化學工業製品 및 資本集約的 重化學工業生産財産業의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하여 資本集約的 設備重機械生産을 90년대에는 크게 기대할 수 있게 有限한 資源의 效率의 再配分을 서둘러야 한다.

先進國의 事例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4—55~1960—61년간에 있어 美, 英, 獨, 佛, 伊, 白, 日, 和 등 8개국은 A그룹의 商品群에서 比較優位를 강화시키고 B그룹의 商品群에서 比較우위를 상실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A그룹

(1) 機械類

사무용기계, 악기, 레코드, 科學·光學·寫眞機器, 金屬加工機械, 電氣計測制御器具, 機械工具, 雜機械.

(2) 輸送用機器

內燃機關, 航空機, 自動車

(3) 化學品

플라스틱, 合成纖維, 石油化學製品, 有機化學品, 寫眞感光材料, 雜化學品

B그룹

(1) 機械類

펌프, 인쇄기계, 섬유기계, 土木鑛山機械, 농업기계, 發電機, 時計, 트랙터, 보일러 및 그 플랜트, 電池 및 電源

(2) 輸送用機器

선박, 자전거, 철도차량

(3) 化學品

화장품, 비누, 비료, 無機化學品, 의약품, 콜타르染料, 精油, 塗料, 火藥.

같은 기간중 日本에서 比較우위를 강화시킨 産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勞動集約財

綿絲, 기타織物, 旅行用品, 리본類, 카페트類, 科學·光學機器, 신발類, 毛織物, 타이어, 고무製品, 錄音器, 樂器, 皮革製品, 紙製品, 고무材料, 革衣類, 家具, 紙·紙材香水, 化粧

品, 醫藥品, 皮革, 영화용 film, 毛皮 등 24品目

(2) 重化學工業財

船舶, 레일, 鐵道車輛, 電氣機器, 金屬製品, 自轉車, 鐵鋼管, 衛生用品 및 暖房照明器具, 帶鋼, 버스·추력, 自動車車臺 및 部品, 有機化粧品, 重電機器, 플라스틱材料, 事務機械, 火藥, 無機化粧品, 錫乘用自動車, 動力機, 等, 金屬加工機械, 農業機械, 트랙터, 비행기 등 24品目.

國內産業構造가 변화하는 이에 따라 比較優位構造가 변화한다는 類型은 特殊의인 것이 아니라 一般的 必然的인 것이며 그것은 생산을 가능케 하는 諸要因중 土地를 自然 및 勞動力에 대한 相對的 供給이 달리고 그결과 資本 및 技術에 더욱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술적 조건, 그리고 그 결과로서 要素의 相對價格構造의 변화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歸結이다. 따라서 「輸出을 통한 發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은 우선 장래에도 比較優位를 가질 수 있는 産業을 중심으로 産業構造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에 입각하여 어떠한 産業이 장래 큰 比較우위를 가질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品目이 선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對답을 先進國의 歷史的 經驗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比較優位産業을 키운다는 것의 裏面이 바로 輸入自由化政策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서 長期經濟政策을 수립, 집행해 나갈 때 輸入自由化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크고 副作用이 적을 것인가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

1. 輸出入比率指數

가장 간단한 것으로 特定財에 관해 輸出額/輸入額×100을 계산하여 그 크기가 100이상인 것은 比較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100은 합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

2. Relative Share指數

한나라의 輸出總額을 X_i , 그중 A財 수출총액을 X_{iA} 라고 하면 $\frac{X_{iA}}{X_i}$ 는 A財의 輸出比重을 나타낸

다. 다음 W 를 전세계수출액으로 보고 W_a 를 전 세계의 A財輸出額을 보면 $\frac{W_a}{W}$ 는 그財의 세계 무역상 비중을 말하여 준다. 그러면 Relative Share 指數는

$$S_{ia} = \frac{X_{ia}}{W_a} / \frac{X_i}{W} \quad \text{또는} \quad S_{ia} = \frac{X_{ia}}{X_i} / \frac{W_a}{W}$$

로 표시하여 그나라의 世界市場에서의 A財市場 占據率이 얼마나 큰가를 통해 比較優位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때 W 및 W_a 에서는 i 國의 數值 즉 X_i 와 X_{ia} 를 빼는 것이 더 合理的이다.

3. 市場占據率指數

Relative Share 指數를 特定市場에 관한 것으로 축소시킨 개념으로 우리의 重要輸出品이 主要市場에서 차지하는 市場占據率의 크기 및 相對的 順位가 기준이 된다.

4. 相對價値

世界市場 또는 重要交易對象國에서의 輸入價格과 우리나라에서의 同一財의 市場價格을 비교하여 국제경쟁력의 大小를 측정하는 것이다. 一國에서의 A財價格 P_{a1} 이 그國에서의 그것 P_{a2} 보다 크나 작으나 ($P_{a1} \leq P_{a2}$), 그차가 얼마나 하는 것이며 이로 다시 $a_1 W_1 R \leq a_2 W_2$ 로 표시된다. 이때 a 는 A財生産을 위한 投入係數, W 는 投入財에 대한 要素報酬率, R 은 換率이다.

5. 比較勞動生産性指數

特定財A와 수출시장에서 競爭關係에 있는 그國(競爭輸出國) 및 3國(輸入國)에서의 勞動生産性和 우리의 그것과의 比, 또는 自由化對象品目 B에 관해 가능한 輸入對象國과 우리나라 사이의 勞動生産性的 比로써 比較우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勞動生産性만 고려하는 방법, 他生産要素의 生産性도 감안하는 방법, 貨幣貨金率을 加重하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다.

$$\text{a) } \frac{\beta}{\beta^i} \leq 1$$

$$\text{b) } \frac{\alpha \cdot \beta}{\alpha^i \cdot \beta^i} \leq 1$$

$$\text{c) } \frac{\alpha \cdot \beta \cdot l}{\alpha^i \cdot \beta^i \cdot i} \leq 1$$

輸入自由化란 한 産業의 淘汰와 그 關係人士에

대한 所得機會박탈을 痛切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上述한 몇 가지 基準중 任意의 하나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加급적 많은 기준을 토대로 比較우위를 산출하고 다시 時間에 걸친 그 變化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A財의 모든 比較優位指數가 가령 50으로 매우 높지만 그것이 이르면 5년전의 150에서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오고 있는 산업이라면 그것은 곧 停滯産業, 斜陽産業임을 나타낸다. 반대로 B財의 경우 指數의 平均을 70에 불과하지만 이르면 3년전의 20에서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保護되어야 할 幼稚産業임을 의미한다. 또한 C財가 150에서 200으로 커지고 있다면 그것은 成長比較優位産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몇가지 比較優位指數의 平均이 100 이상이지만 계속 하락하고 있는 停滯型 成熟産業, 100미만이면서도 계속 그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停滯型 幼稚産業 등의 경우는 輸入自由化는 競爭의 淘汰作用을 할 것이므로 自由化는 추진되 단계적으로 이를 실시하며 成功的인 産業轉換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國內적으로 는 효과적인 産業轉換政策이 併行되어야 한다.

다음 指數의 平均이 100이상이면 계속 그 크기가 커지고 있는 成長型 成熟産業의 경우는 막강한 國際競爭力을 갖고 또 그 크기가 커져가고 있으므로 全面開放을 하더라도 그 충격은 클 수가 없다. 이런 産業의 製品은 즉각적, 전면적인 自由化를 하더라도 百益은 있어도 百損은 없을 것이다.

幼稚産業論에 의하여 輸入이 제한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는 中位의 比較우위, 선진국의 數字例로는 指數의 크기가 80~120 사이에 있는 産業의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構造變動이 심하고 産業의 歷史 그 자체도 매우 짧으므로 50~250사이의 産業은 그 指數가 마이너스方向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保護의 손길을 떼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50이하의 指數를 가진 산업은 保護를 위한 기간이 너무 길고 따라서 그 코스트가 너무 큰 것이므로 이 그룹에 속하는 산업은 비록 그것이 장래의 全力産業이 될 業種이라고 하더라도

라도 현재에 있어서의 保護對象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獨占産業에 대해서는 비교우위의 크기 如何와는 상관없이 輸入에 의한 動態的 競爭을 맞보게 하는 것이 經濟政策的으로나 社會政策的으로나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複占 또는 寡占으로 변화시켜서 規模의 經濟가 유지될 수 있는 部門의 경우는 市場의 나머지를 國內業者에 開放할 것인가 外國競爭者에게 開放할 것인가를 장기적인 資源活用이란 기준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5. 맺는 말

우리의 國土는 有限하여 9만8천km²에 불과하고 人口도 35,860천명에 불과하다. 이같은 土地/人口比下에서 1人當 3,880달러(1974년의 日本水準)의 所得을 실현시키고자 하더라도 國土 1km²

當負擔은 1,412,843달러로 1974년 日本의 그것의 1.23배가 된다. 한편 可耕地率을 40%라고 보더라도 可耕地는 39,390km²이고 이를 1977년의 農業附加價値를 기준하면 GNP는 12,924백만 달러, 1人當 GNP는 360달러에 불과하다. 1976년에 있어 1人當 附加價値의 크기는 338,632원이었는데 輕工業의 경우는 1,708.6천원, 重化學工業의 경우는 2,545.7천원, 농림업의 경우는 557.2천원이었다. 이러한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좁은 國土위에서 높은 1人當 所得을 실현시키려면 1人當 附加價値産業性이 높은 産業을 特化한다는 것이 必須的이다. 모든 종류의 産業을 이 좁은 國土위에 가질 수는 없고 설혹 全 國土의 工場化가 실현되더라도 生産性높은 工場에 特化하지 않은 한 높은 1人當 GNP를 기대할 수는 없다. 輸入自由化는 이러한 認識을 토대로 출발하여야 한다.